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성공적 이행을 위한 조건¹⁾

이재희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사회적 안전망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 육아와 일의 병행, 주거 문제 등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 장려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 방향성

가. 육아시간 보장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필요할 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어 부모가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부모들이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상한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기 3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1) 본 원고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 6. 19)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상한이 적용되도록 재설계하여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확대할 예정이며, 고위험 임신 등 특정 상황에서는 임신 중에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돌봄환경 구축

정부는 0~11세 유아와 아동이 언제든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2025년까지 5세부터 시작하여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기본 8시간에 추가 돌봄 4시간을 더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이 출퇴근 시간이나 방학,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운영 시간을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2027년까지 30만 가구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소 이용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줄이고 사전 신청 조건을 완화해 돌봄 접근성을 높인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국내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

〈표 1〉 저출생 추세반전 핵심분야1(육아시간 보장 정책)

유연한 휴직·휴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확대·개선
소득걱정 없는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눈치 보지 않는 제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로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
아빠육아휴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 연장, 분할횟수 3회 확대
중소기업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 40만원 인상 •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지원

<표 2> 저출생 추세반전 핵심분야2(돌봄환경 구축 정책)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보육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 제공,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공공보육 이용률 40%에서 50%로 확대,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순 학년 확대 및 프로그램 무상 운영
틈새돌봄 촘촘하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보육기관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 • 늘봄학교 방학에도 운영,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 공백 대응
돌봄서비스 수요자 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 완화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

국민 가사관리사 및 유학생, 근로자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향후 외국 가사 인력 도입 제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가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돌봄환경 구축의 목표는 교육·보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여 모든 가정이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는 정부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틈새 돌봄 지원을 통해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 결혼·출산·양육 메리트(Merit)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이 장려될 수 있도록 주택 지원과 세금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로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 및 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할 예정이다. 주택 자금 지원 조건도 완화하여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신생아 특례 대출과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의 청약 자격을 개

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소득 제한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자녀 세액 공제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시설에 어린이 패스트 트랙과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 생활 혜택을 확충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대학 특별 전형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고, 지원 횟수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며, 난임 휴가와 제왕절개 수술 비용도 지원하는 등 출산 의지를 가진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과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세금 감면 및 장학금 혜택을 통해

〈표 3〉 저출생 추세반전 핵심분야3: 결혼·출산·양육 메리트(Merit)

주거 메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과 주택공급 확대 •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한시적 추가 완화 •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 확대
결혼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 결혼 비용부담 완화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유자녀 가정 메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 확대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 확산 유도 •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8기준 완화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3자녀 이상→2자녀 이상) 확대
임신·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 지원 •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난임시술 지원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 한다. 또한,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원하는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성공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조건

정부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와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실제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가. 저출생 대응 부처 신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부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지만, 실행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 주거, 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부처가 나누어 책임을 지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적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저출산 대응부가 설립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출생 대응부가 재정 운영과 예산을 총괄한다면, 정책의 중단 없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강화

또한 정책을 평가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시한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저출생 정책의 기반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기업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제시된 것과 같이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 및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경제 구조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므로, 이번에 발표한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는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 협력하여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